

데스크칼럼

고선주

문화체육부장



우연하게 문단 선배와 함께 국밥집에 갈 기회가 있었다. 하필 ‘기는 날이 장날’이라고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넘쳐났다. 물론 공용주차장도 만차여서 고생을 한 뒤 끝이었다. 광주 북구 임동과 광주역 인근에서 주로 보내는 필자의 입장에서 국밥 한 그릇 하기 위해 송정리까지 오가는 일은 쉽게 감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나기로 약속 한 곳은 송정매일시장 내 국밥집이었다. 매일 시장 초입인데 A국밥, B국밥, C국밥, D국밥 등 네곳이 몰려 있다. A국밥은 건물을 새롭게 지은 듯하고, 나머지 세 곳은 아예 시장 안에 자리하고 있다. B국밥은 웨이팅이 있었고, 나머지는 웨이팅이 없었다. C국밥은 블루리본을 받은 집이었다.

그 나머지는 잘 알지 못한다. 얼마 전에 여기가 유명한 다기에 A국밥집에서 한 그릇 말아 먹은 적이 있었으나 선배는 B국밥 등이 맛집이라 했다. 자신은 일전에 C국밥집에서 한 그릇 똑딱 비운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묘하다는 생각이 가지지 않았다. 오후 1시가 넘긴 웨이팅이 있는 집은 한 집이었다. 맛은 대중소이한 듯 한데 되는 집만 되는 듯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소위 국물 요리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때부터 드는 생각이었다. 원조라는 집도 그동안 여러 군데 둘러 봤다. 원조싸움은 골탕 등 다양한 먹거리에 폭넓게 걸쳐져 있다.

다행히 이곳 국밥집은 간판에 원조라고 쓰는 집은 없었

국밥집에서 우연하게 든 음식 단상들

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다만 분명한 것은 먹어본 두 집의 국물맛은 같았다. 고소한 국물을 선호하는 필자 입장에서 B국밥의 국물이 가장 와 닿았다.

돼지 부위가 고르게 들어간데다 선지 두 덩어리가 더해져 입맛을 자극했다. B국밥은 고아서 낸 국물인데 첫 술을 떠 먹어보고 “게임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그릇이 스搪(스테인리스)이어서 열전도율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뚝배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물을 많이 먹어서 건강에 좋을 것 없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기는 것을 어찌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할 밖에 없다. 선배에 따르면 이집 뿐만 아니라 저집도 맛있는 집이라 표현했지만 필자에게는 지난 9월 고흥 과역의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E국밥에서의 강렬한 기억이 복기됐다. ‘맛이 예술이다’는 표현을 흔하게 하곤 하는데 이곳이 그런 곳이었다.

‘내 마음의 국밥’ 순서는 변화가 없는 편인데 과역에서의 국밥은 단박에 순위를 재배열하고도 남았다. 음식은 철저하게 개인적 취향차가 크기는 하다. 이왕이면 같은 돈을 내더라도 맛있는 것을 가성비있게 먹으면 만족도가 높을 것이기에 맛집 검색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일상 중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다.

요즘은 차가 있어서 내비를 켜고 못 갈데가 없다.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다 찾아갈 수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장거리 운전이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현대인들이다.

이에 앞서 단 한가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원정을 다녀온다는 무용담에서부터 광주를 기점으로 대구

나 전남 일대 시외로 원정을 다녀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투적 버전이 된지 오래다.

어딜 가면 꼭 맛집 검색을 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특히 군단위로 여행을 가면 ‘군청 옆 식당가를 가라’는 말도 회자된다. ‘가기를 가면 (맛)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한다. 필자 역시 잘 모르면 군청 근처를 뒤흔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하는 맛집 추천보다는 블루리본을 받은 맛집을 선호하는 편이다.

영암에 가면 전직 대통령의 증식 셰프가 문을 연 F종식 같은 곳은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곳이라서 왕인박사유적지를 방문할 기회가 되면 호기심에 한번쯤 둘러봄직하다. 이곳 역시 웨이팅이 엄청난 곳이다.

전남·광주지역은 예로부터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3면이 바다인데다 젓갈류가 풍성한 다른 지역에 비해 남도만의 특유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이곳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남도인들은 ‘타지역 음식이 맛이 없다’고 타박하기 일쑤다. 서울 용산역 일대를 들쭉시키고 다녀도 필자의 입맛을 저격하는 음식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대표적 느낌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남도는 골목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데도 맛의 분향이라 하고 하는 왕관을 빼앗긴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치축제 같은 것으로 왕관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가령 김치공장의 김치가 직접 담근 것보다 맛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맛있는 국밥집의 국물처럼 웅성끓은 음식의 분향이 되기 위한 비책은 마련돼 있는지를 묻고 싶다.

기고

이병준

(사) 필문 이선제선생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제1회 회경루와 이선제 역사문화제’행사를 맞이하며 가을이 절이기는 10월, 광주천 변 회경루(喜慶樓) 뜰에서 특별하고도 뜻깊은 역사문화의 장이 펼쳐진다. 오는 10월 24일 성대하게 막을 올리는 ‘제1회 회경루와 이선제 역사문화제’가 바로 그 현장이다.

조선 세종 대부터 문종 내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광주목(光州牧) 복호(復號)의 역사적 회회를 575년 만에 현장감 있게 재현하고, 고창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 세운 필문 이선제(李先濟, 1390~1453) 선생의 애향정신과 선비정신을 오늘의 시선으로 온전히 조명하는 자리다.

회경루는 단순한 조선시대의 누각이 아니다. 한 고을의 시련과 명예 회복, 그리고 백성들의 기쁨이 고스란히 새겨진 광주 공동체의 자존감 회복을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이다.

지난 1430년(세종 12년), 광주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고을의 행정 단위가 ‘광주목’에서 ‘무진군(茂珍郡)’으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다. 고을의 지위가 낮아진 것은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자긍심의 상처로 남게 됐다. 20년이 넘도록 실추된 고을의 명예를 되찾고자 팔을 벗고 나선 이가 바로 조선의 위대한 역사가이자, 호남 사람의 조종(祖宗), 문종과 단종의 스승이었던 필문 이선제 선생이다.

필문 선생은 집현전에서 학문과 경륜을 쌓은 유학자로서, 고창의 억울함과 명예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문종 임금에게 간곡하고도 정연한 상소를 올렸다. 마침내

1451년(문종 1년), 광주는 옛 지위인 ‘광주목’으로 복호했다. 21년 만에 고창의 명예가 회복되자 온 고을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서로 축하를 나누었다. 이에 광주목 관원과 민초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咸喜相慶)’는 뜻을 담아 건립한 누각이 바로 회경루다.

회경루에는 필문 선생의 남다른 충정과 한 고을의 자존심,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나눈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기에 그 가치는 단순한 목조 건축물의 역사성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광주 정신문화의 뿌리이자, 옛 선조들의 남긴 유산적 역사문화의 상징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사) 필문 이선제선생기념사업회(회장 고재유)가 2019년 창립 이래 다각도의 노력이 마침내 증건된 회경루에서 575년 만의 첫 역사문화제로 결실을 맺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축제는 역사적 송고함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민 참여 문화의 장으로 꾸려진다. 식전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이서현 시인의 회경루 시 낭송과 보물 ‘회경루 방화도’ 및 필문 어록 해설이 진행된다. 이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주제극 ‘회경루와 필문 이선제’가 무대에 오른다. 웅장한 취태대의 진법 연주 속에 문종 임금의 행차, 이선제 선생의 간곡한 상소, 파발군사가 가져온 광주목 복호 교지 전달, 그리고 ‘회경루’ 제명 과정이 철저한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된다. 뒤이어 삼현육각과 검무, 명창의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등 격조 높은 전통 국악 공연이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 행사가 단순히 과거의 규모와 화려한 프로그램에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정신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와 교육청, 남구청 등 지자체와 광남일보, 전남일보, KBC광주방송 등 주요 언론,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대중문화재단, 광산이씨 문중 등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다. 역사문화유산은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지만, 그 의미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새롭게 살아난다. 575년 전 광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뻐했던 까닭은 단순히 행정상의 지위가 회복됐기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훼손되었던 고을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의 자긍심을 회복했다는 데 더 큰 역사적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며 절실하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시대 일수록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확인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 미래를 향한 지혜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제1회 회경루와 이선제 역사문화제’는 단순한 과거 재현 행사를 넘어, 역사 속에서 오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내일로 이어 나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올가을, 광주천의 바람과 회경루 뜰에 울려 퍼질 시와 음악, 그리고 역사 재현의 장면들이 시민들에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가슴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한다. 575년 전 광주 사람들이 나누었던 ‘함께 기뻐함’의 정신이 오늘의 전남 광주에서도 새로운 연대와 통합, 희망의 에너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회경루가 간직한 기쁨의 역사가 흘러간 기억 속에 갇히지 않고, 따뜻하게 있고 미래를 밝게 비추는 전남 광주의 영원불멸의 정신으로 오래도록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산단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땅을 공급하고 기업을 입주시켰다고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고 사람을 채용하고 매출을 올려야 지역경제에 온기가 들 수 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거창한 지원금만은 아니었다.

초기 자금 이후에도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여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결국 문제는 ‘얼마를 지원했느냐’보다 ‘그 지원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지역에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단순히 예산 배분으로 줄이려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 기업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투자자를 만날 수 있고,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실제 공장을 돌리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설

국토교통 R&D 수도권 편중…제도 개선 절실

우리나라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너무 심하다.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예산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분석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5624억원 중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3328억원(59.2%)이나 됐다.

그나마 비수도권에 배정된 예산(40.8%)도 연구 인프라가 많은 대전(17.4%)에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초라한 예산을 받았다.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대상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였다.

산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 예산 배정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휩쓸어간 것이다. 이들 대학에 배정된 예산만 전체(783억원)의 51.7%(405억원) 나 됐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 아닌 최소 6년간 단 한해도 빠짐없이 고착화돼 온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국토교통 R&D분야 자율주행 관련 155개 과제(총 511억8000만원) 중 단 5개 과제, 12억6000만원(2.48%)을 배정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전담 기관의 평가, 그리고 제도적 장치 미비가 크게 작용했다.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시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이 없어 연구 인프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연구기관이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과제 공모 시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와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 R&D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농어촌기본소득, 소멸위험지역 차등지원을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게 설계된 지역 순환형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전남광주 4곳을 비롯해 전국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5개 군으로 18개 군을 추가 확대기로 했다. 사업비는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인데 올해는 국비 보조율이 40%여 서 60%는 광역 지자체와 군이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초·광역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지방비 매칭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올해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38개군(55.1%)이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다.

특히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 전체 16개군 중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경북·경남은 각각 10개 중 6개군, 전북은 7개군 전체나 된다.

광역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전북(21.81%), 경북(23.12%), 전남(23.36%)도 20% 초반에 머물러 있다.

물론 정부도 현행 40%인 국비보조율을 내년에는 50%로 인상키로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열악한 군은 이도 감당하기 어렵다.

예컨대,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1개 군당 평균 총사업비(333억원) 중 시와 군이 50%인 약 166억원을 각각 83억원씩 매칭해야 하는데 완도(6.40%), 고흥(6.42%)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연간 80억원이 넘는 군비를 매년 매칭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업비 국고보조율을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55·60·70%의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또 소멸위기 전체 군으로 이 사업이 조기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박형인	사 장 정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취재수첩

지역을 위한 돈은 어디에 머무는가

윤 용 성

산업경제부 기자



“왜 지역 경기는 그대롭습니까.”

지역 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이 같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비슷한 질문을 수차례 받는다.

전남광주지역 곳곳에는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지원사업의 숫자와 기업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산단은 분양됐지만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

고, 기술력을 갖춘 지역 벤처기업은 투자자를 찾아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실제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펀드지만 투자 과정에서는 수도권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갔다. 지역을 위한 정책자금도 점차 지역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 되문게 되는 대목이다.

물론 투자에는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있다. 지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도 보인다.

투자사와 대기업, 연구기관,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이 투자를 받고 사업을 키우려면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 네트워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